

정·박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승부처 ‘호남 표심’ 쟁탈전

〈청래〉 〈찬대〉

민주 당권 경쟁… ‘기후에너지부’ 유치·내란 척결 등 선명성 부각
27일 2차 방송 토론… 다음달 2일 호남·수도권, 강원 등 통합 연설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각축하는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호남 구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후보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촉구했고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약속하는 등 호남 당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는 또 당 대표 선거임에도 SNS를 통한 내란척결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선명성 부각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수해복구 하러 아산시에 내려가는 중입니다”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빠진 호남 등 일부 지역은 추가로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고 썼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나주 다시민 신광리 일원에서 수해복구 자원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찬대 후보도 전남지역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나주, 곡성, 구례, 남원, 광주 전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요청한다”며 “아직 피해 집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누락된 곳이 많다. 조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함께 충분한 복구지원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현재 광주, 전남에서는 담양군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두 후보는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해복구를 돕는 한편, 지지세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저는 호남사위입니다’라는 제목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강진군 작천면 평기리가 제 처갓집인 호남사위 정청래가 호남의 경제발전을 책임지겠다”며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 호남인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그동안 정채됐던 호남발전의 물꼬를 트겠다”고 썼다. 정 후보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가 호남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도 다짐했다. 박 후보도 “기후에너지 수도는 호남”이라면서

“경제는 미래를 봐야한다.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에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최적지는 단연코 호남”이라며 “호남을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강성 지지층의 관심이 높은 ‘내란 척결’ 메시지 경쟁도 이어갔다.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초반 승기를 잡은 정 후보와 역전을 노리는 박 후보 모두 선명성을 부각해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김건희가 원종이다. 김건희가 A TO Z”라며 “김건희도 윤석열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했다. 박 후보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시 가결 처리하고, 향후 수사 결과 국민의힘이 위한 정당임이 명백해지면 정부에 위한 정당 해산 절차 착수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오는 27일 당이 주최하는 2차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으며 다음달 2일 경기도에서 호남권 수도권, 서울·강원·제주 통합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왼쪽), 박찬대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해야”

조작기소대응 TF “검찰 정적 죽이기 기소, 전례 없는 정치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씨의 증언, 대남공작작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

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견대 의원의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서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정치 검사들이 이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손을 떼게 하고, 사건 기소와 분리된 객관적인 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하라”며 “법무부는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서 검찰이 왜 증거 기록을 1년간 제출 안 했는지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2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물증으로 제출됐다고 언급한 뒤 “항소심에서는 구글 타임라인 증거 제출을 안 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육,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논의했다. TF는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임 정권과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방침이다. /연합뉴스

“방송 토론·연설로 대선 지지 후보 선택”

한국갤럽 조사… 36.3% 꼽아

지난 대선에서 TV 방송토론과 연설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5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24일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된 조사에서 ‘지지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된 경로’를 묻는 말에 36.3%가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꼽았다. 이어 언론 보도가 20.0%,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이 14.4%였다. 지지 후보자 선택에 고려한 사항으로는 ‘능력·경력’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책·공약’이 24.3%, ‘소속 정당’이 21.6%였다. 선관위의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0%로, 제20대 대선 조사 때(38.6%)보다 13.4%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응답은 36.3%, 본투표를 했다는 응답은 63.6%였다. 사전투표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 본투표 응답은 60대와 70대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이 부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국힘 ‘혁신안 의총’ 빈손 종료

윤희숙 혁신위원장 불참… “다음 의총서 설명 듣고 토론”

국민의힘은 23일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본격 논의도 못한 채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광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직접 의총에 출석해 혁신안과 함께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야 토론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의총에서 혁신위원장께 혁신안에 대해 설명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선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가 제안한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당원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광 수석대변인은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 이유를

문자 “의총이 있다고 연락했는데 본인이 참석 여부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혁신위와 지도부 간 이견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참석한 분들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이 어렵다’,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어떤 이유로 이런 안이 필요한지 설명해 줘야 토론이 가능하다’는 기류였다”며 “몇 분이 같은 말을 했고 내용을 논의하긴 힘들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총 개최 일정에 대해선 “조만간, 빠른 시일 내 혁신위원장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의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오후 개최될 본회의의 관련 안건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